

□ 인터뷰 / 최용규 원예특작국장

올 생약부문 지원계획은

▼정부에서는 생약 생산·유통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매년 시설자금을 확보하여 지원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의 지원실적과 금년도 지원계획은 어떠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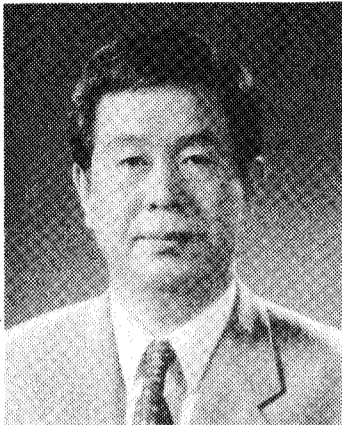
금년 48억원 지원계획

△세부 지원내역과 지원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원시설은 생약육묘포 설치, 종묘대, 조세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비와 선별·탈피·세척·탈수·건조기등 각종 기기구입 자금 및 집하장 설치자금 등이며 지원규모는 92년 부터 97년 까지 총174개소에 298억원을 보조 및 융자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9개소에 48억원을 보조 및 융자 지원할 계획이나 금년도 추경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생약재배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매자금 115억지원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집하장 설치자금을 지원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높여 나감과 아울러, 매년 생약수확기에 농협과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수매자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가격하락 방지와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 수확기에 최대한 물량 수매 산지가격 지지 판로 확대 계획 ”

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작년에 생약수매 자금으로 농협에 30억원, 유통공사에 내수용 수매자금 39억원과 수출용 수매자금 38억원등 총 10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작년대비 7.5%가 증가한 115억원(농협40억원, 유통공사 75억원)을 지원하여 수확기에 최대한의 물량을 수매토록 함으로써 산지가격을 지지하고 생약재배농가의 판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IMF구제금융 신청이라는 경제위기 상황이 국내 생약농업한

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하시는지요? 또 그에 따른 정부의 생약농업정책은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조 조정의 계기로

△지금 우리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 파고에 이어 IMF구제금융 신청이라는 커다란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UR타결 당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우리농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해온 것을 뒤돌아볼 때, 지금의 IMF위기를 농업 구조 조정의 계기로 활용한다면 우리농업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약농업의 경우에도 IMF구제금융 신청등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환율상승으로 비료, 농약, 농기계 및 유류대 등 이 큰 폭으로 상승되어 경영비가 올라가고,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등의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신규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보다는 기존 경영체의 내실화에 비중을 두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영비 절감을 통해 증가되는 생산비 상승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하고, 국내 부존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율인상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우리생약농업 지킴이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사설

IMF시대 살아남기

IMF한파로 온나라가 구조조정이라는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 생약업계라고 이같은 변화의 바람을 비껴갈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최근 환율상승 영향으로 수입약재시세가 폭등하는 한편 국산 약재는 소비심리위축으로 다소 내림세를 기록함으로써 그동안 2배에서 많게는 10배이상 벌어졌던 수입과 국산의 가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의약품수출입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약재 수입량도 예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수입물량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수입금액은 훨씬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율인상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는 중국으로 부터 총3만여 t의 약재를 수입해 오기 위해 1억달러를 넘게 소비했다. 간과할수 없는 것은 이들 수입약재 중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품목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하고 또 과거에는 국내 소비량을 충당함은 물론 수출까지 해오던 품목들도 많다는 것이다. 지황, 시호, 백출, 지모 등도 그런 품목들 중의 하나.

이들 품목들은 시장개방과 함께 값싼 중국산이 쏟아져들어오면서 가격경쟁에서 밀려 국내생산기반을 상실하게 됐고 지금은 거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지황, 시호, 백출, 지모 총수입금액은 약 1백억달러를 웃돈다.

만일 우리가 이들 약재의 생산기반을 다져서 경쟁력을 갖추나간다면 수입약재를 들여오기 위해 비싼 달러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수출로 외화획득까지 할 수 있다. 국내 생약생산기반을 다지는 일은 조만간 다가올 완전개방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 아닐수 없다. 최근 환율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원자재, 비료, 농약값 등 농자재 값 대폭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우리 생약업계에도 적잖은 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입약재값이 폭등한 지금이야말로 국산약재의 경쟁력을 기를수 있는 기회일수 있다.

그러기위해서는 농민 스스로의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이롭지만 생약 주산단지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실질적인 주산단지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생약부문의 예산도 생산기반마련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

지금 협회에서는

부칙조항을 본문에

지금까지는 부칙 제3조에 경과조치로 머물렀던 '농가 자유로운 판로 허용' 조항이 최근 개정안에서 관리규정 제34조 2항에 공식 명문화됐다. 그러기까지는 생약협회의 발빠른 대응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1월초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농가의 판로관련 사항이 종전과 다른 부칙조항으로 첨가돼 있었다.

경과조치로서의 부칙조항은 일시적이고 언젠가 사라질 우려가 많다는 판단하에 생약협회는 곧바로 복지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생협은 건의서

를 통해 「관리규정 중 '생산농민의 자유로운 판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부칙 제3조를 본문에 명문화 함으로서 규격화 제도 시행 하에서도 생산농민들의 자유로운 판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그결과 부칙 3조의 농민판로허용 조항을 제32조 2항에 명문화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생약협회는 앞으로도 한약관리규정 개정안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생산농민들이 안심하고 재배에 임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 조성차원의 정책적 건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농가판로허용' 명문화

복지부 한약유통관리규정 개정안

오는 4월부터 한약재의 안전성 검사 등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규격화대상 한약재가 36종에서 5백14종의 모든 한약재로 확대된다. 이를위해 수입한약재는 통관 전에 검사를 받아야하며 중독, 변질, 부패, 오남용 우려가 있는 한약재는 제조업체에서만 제조판매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보건향상과 소비자보호, 국산한약재의 품질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1월26일 입안예고하고 관련부처 및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거쳐확정·시행할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격품대상 한약재를 현행 36종에서 규격이 정해져 있는 모든 한약재로 확대(5백14종)

△속지황·반하 등 제조공정이 필요한 18개품목, 녹용, 용안육 등 위·변조가 우려되는 24개 품목, 부자·주사 등 중독우려 7개 품목과 기타 감초·다우기 등 총 69개 품목은 제조업체에서만 제조하도록 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

△국산한약재등을 농가나 판매업소에서 단순포장하여 유통시키

는 경우에도 연 1회이상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

△현행 수입한약재에 대한 통관후 검사를 통관전 검사체제로 전환하여 불량 수입한약재의 수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수입한약재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시험연구소 외에 한국식품위생연구원, 도환경연구원등을 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

△종래 제조업소는 도매업소에 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거래를 제한하던것을 도매업소뿐만 아니라 소매업소 및 한방병원에 직접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철폐.

시행시기는 최근 IMF 사태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정과 관련업계의 건의와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